

---

2022년도 증도면  
정 기 종 합 감 사 결 과

---

# 신 안 군

## 시 정 요 구

제 목 공사추진 부적정(공사비 과다지급)

관 계 부 서 증도면사무소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 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사계약의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증도면에서는 2019. 08. 16. (유)□□토건과 도급 계약한 “증도 □□마을 배수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플룸관을 관급자재로 35개를 구입하였으나 설치는 36개로 되어 있어 1개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44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표1】 과 같이 11건에 대해 설계도서와 불일치하게 시공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비 6,127천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증도면장은**

- ① 계약 체결 시 관련규정(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② 미시공 공사비 지급분 **6,127천원**에 대해 회수조치 하시고,
-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는 “훈계” , 4명은 “주의” 처분

# 신 안 군

##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사업 사후 정산 부적정

관계부서 증도면사무소

내 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체결할 때에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장 제3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규정 제7조(사용기준) 및 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는 안전관리비를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해야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체결할 때에는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서는 발주자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19. 09. 09. (주)□□와 도급계약한 “증도면 소재지 군도□□호선 우수받이 재설치사업”외 7건은 환경관리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불문명 및 현장과 사진이 상이하는 등, 증도면사무소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909천원을 부적정 지급하였다.

또한 ‘19. 11. 11. (주)○○건설과 도급계약한 “증도 ○○마을 가로수조성 및 농로포장공사” 외 3건은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이었음에도 미계상하여 공사 발주를 하였다.

**[조치할 사항] 증도면장은**

-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안전관리비 집행(정산) 증빙자료의 확인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환경보전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지급분 909천원을 회수하여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는 “훈계” , 4명은 “주의” 처분

# 신 안 군

##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계약체결 부적정

관 계 부 서 증도면사무소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서는 건설업 업종에 따른 업무내용에 대하여 구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함에 있어 사업내용에 따라 해당되는 건설업 업종의 면허 보유현황을 확인하여 도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증도면사무소에서는 2019. 12. 30. □□설비건설과 “증도면 □□□ 여과기수리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내용의 관련규정에 따라 동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 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했으나 도급자는 관련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이며, 【표1】의 사업 또한 적정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도급 계약하였다.

### [조치할 사항] 증도면장은

- ① 앞으로는 관련시방서를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는 “훈계”, 2명은 “주의” 처분

# 신 안 군

##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검사 업무 소홀

관계부서 증도면사무소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있는 목적물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따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증도면 계약담당자는 2019년부터 2022년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한 건설공사 239건<sup>1)</sup>(‘19년 61건, ’20년 76건, ’21년 45건, ’22년 57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특히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22건의 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최종 하자검사를 하지않고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다.

**[조치할 사항] 증도면장은**

-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② 하자검사 실시 대상 사업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공사 준공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연 2회 이상,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별도의 하자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는 “훈계” , 4명은 “주의” 처분

# 신 안 군

## 주 의 요 구

제 목 인지세법에 따른 징수업무 소홀

관 계 부 서 증도면사무소

내 용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에서는 인지세의 납부의무와 범위에 대하여 정의 하고 있으며,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증도면사무소에서는 수감기간인 2019. 6. 1.부터 2022. 9. 30.까지 1천 만원을 초과하여 계약한(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 중 【표 1】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의면장은

- ①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은 “훈계” ,3명은 “주의” 처분



# 신 안 군

## 주 의 요 구

제 목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 소홀

관 계 부 서 증도면사무소

내 용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에 의하면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으며,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수도사용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하며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가산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그리고, 동 조례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급수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22. 10월 감사일 현재 증도면 상수도 요금이 41가구 2,267천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특히 23수용가는 3개월 초과하여 723천원을 체납하고 있으나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체납 독려 및 급수정지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징수 업무를 소홀하게 추진하였다.

### [조치할 사항] 증도면장은

- ① 앞으로 요금체납 상황을 점검하여 요금을 철저히 징수토록 적극 독려하여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6명 “주의” 처분

# 신 안 군

## 주 의 요 구

제 목 콘크리트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관 계 부 서 증도면사무소

내 용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콘크리트(레미콘)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칠 수 없을 경우라도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한 경우에는 1시간, 저온이고 습윤한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를 치기 전 시공자는 철근 및 거푸집 설치, 레미콘 운반 및 타설 등 세부 공사방법에 관해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콘크리트는 친후 저온, 건조, 급격한 온도 변화에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용 비닐, 마포 등을 이용하여 살수(撒水)하여 항상 습윤상태로 5일간 유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로포장, 옹벽, 개거 등 콘크리트 시설물이 적정 강도, 내구성,수밀성 등을 갖을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재령 28일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 콘크리트 압축강도 : 철근콘크리트 210kg/cm<sup>2</sup>, 무근콘크리트 180kg/cm<sup>2</sup>이상

하지만, 증도면에서는 콘크리트 포장, 개거 등 주요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에 정공정표상에 60일 이상으로 정해 놓고도 [표1] 과 같이 적정 공기에 크게 미달하여(12~26일) 콘크리트 강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 처리하여 시설물 하자발생 우려 등 공사추진을 부적정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증도면장은

- ① 앞으로는 관련시방서를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는 “훈계” , 4명은 “주의” 처분

# 신 안 군

## 주 의 요 구

제 목 회계관직 부재중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증도면사무소

내 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직무대리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증도면에서는 2019년 부터 2022년 감사일 현재까지 지출원(부면장), 재무관(면장)이 부재중인데도,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e-호조 사용자 대직권한부여를 하지 않고 총 544건<sup>1)</sup>의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업무처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증도면장은

- ① 앞으로 지출원(부면장), 재무관(면장)이 부재중일때는 회계업무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e-호조 사용자 대직권한부여 조치를 선행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는 “훈계” , 4명은 “주의” 처분

# 신 안 군

##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증도면사무소

내 용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써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 대회,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형평성 있게 집행해야 한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제잡비 (화장지, 종이컵, 커피·차 등)를 위한 우선 경비로써 부서 공통경비 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한다.

### 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증도면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과 같이 집행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집행을 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증도면장은

-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해당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게 집행 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는 “훈계”, 4명은 “주의” 처분

# 신 안 군

##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과목 목적외 사용

관 계 부 서 증도면사무소

내 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172호, 2021.1.1.)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방회계법령·지방재정법령·지방계약법령 등 관계법령 입법 취지를 근거로 예산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 편성목 통계목)를 보면,

사무관리비(201-01)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공공운영비(201-02)은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로, 재료비(206)은 제품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등 구입과 유류비, 사료·종자구입비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로, 행사실비보상금(301-09)은 교육·세미나·공청화·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로 기타보상금(301-12)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비로, 시설비(401-01)는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의 조 및 동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및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증도면에서는 증도면 폐기물 소각시설 전자저울 구입비 집행 등 17건 9,420천원을 집행하면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표 1】과 같이 부적정 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증도면장은**

- ①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회계서류 작성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는 “훈계” , 4명은 “주의” 처분

# 신 안 군

##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부적정

관 계 부 서 증도면사무소

내 용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제7조의 농지 소유 상한 규정에 따르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상속농지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의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도면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 발급 업무를 하면서 주말·체험영농은 신청자의 세대원 전체 소유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까지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21. 2. 5일 대전광역시 ㅇ구 ㅇㅇ동 ㅇㅇㅇ 외 6건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상한 면적(1천제곱미터) 초과 신청자에 대하여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부적정하게 발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증도면장은

-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1명은 “주의” 처분